

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왔다는 점에 대하여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종전에 허가제였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기업의 임직원용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도 철폐되어 외국인도 용도나 규모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

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이나 외국인전용공단의 분양 촉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투자조사단은 한국의 SOC산업 및 우량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의 목적을 갖고 이를 현지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확인·조사를 위해 내한한 만큼 이번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강우 부위원장과 의 면담을 통해 국내투자에 대한 관심과 신뢰감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98년 공정거래모니터 제도」 본격 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모니터제도를 지난 '97년 5월에 발족한 이래 사건신고와 제도개선 및 소비자이익의 보호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데 힘입어 「'98 공정거래모니터」를 종전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선발하고 지난 6월 3일(수) 지역별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에 공정거래모니터로 선발된 인원은 총 300명으로서, '97년에 활발한 제보를 한 95명의 '97 모니터요원은 재위촉하고 나머지 205명은 총 513명의 지원자 중에서 신규로 선발하였다.

공정거래모니터는 지난해에 공정거래모니터의 제보에 따라 주차요금의 정산단위를 30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 조정하는 「주차장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활발하고 효율적



인 모니터제도의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모니터들의 활동을 자문·지원하고 공정거래제도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보하기 위한 교수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자문위원 3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